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50
----------	-----

2024. 11. 25.(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19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정선미 정책기획관)

가. 제안사유

- 일몰도래('24. 12. 31.) 감면 중 지속적 지원 필요 분야의 감면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명시 및 감면관련법 분리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나. 주요내용

-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제6조, 제9조, 제12조)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 변경(안 제7조)
-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 경감율 신설(안 제11조의2~3)
- 감면적용 관련법 분리제정에 따른 정문 정비(안 제4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확대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7건의 감면 기한 연장,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기간의 연장 및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개정은 필요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이 조례안은 1) 도세 감면 기한 연장, 2) 감면 기간 확대(기간연장 및 세율 변경), 3) 감면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문항	조 문 내 용	감면종료일		감면내용	비 고
			개정전	개정		
1) 감면 기한 연장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100%)	3년 연장
	제3조 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100%)	3년 연장
	제4조 제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75%)	3년 연장
	제5조 제1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75%)	3년 연장
	제6조 제1·2항	도시가스사업 지원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50%)	3년 연장
	제9조 제2항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25%)	3년 연장
	제12조 제1·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100%)	3년 연장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계속)

구분	조문항	조 문 내 용	감면종료일		감면내용	비 고
			개정전	개정		
2) 감면 기간 확대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7년	15년	취득세 (100%)	-
3) 감면 규정 신설	제11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	-	-	취득세 (100%)	법50, 조례50
	제11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	창업·이전 취득세(100%)	법50, 조례50
			-	-	공장신·증설 취득세(75%)	법50, 조례25

1) 도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등 7개 조항)

-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임
 -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함
- 안 제3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낙후된 시설과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시장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함
 - 다만,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감면액과 앞으로의 3년간(2025년 ~ 2027년) 감면예상액이 없다는 것은 이 조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함
 -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가 2020년 2월 18일에 삭제되었음
 - 인용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하나, 지난 2021년 12월 17일, 조례 일부개정 당시에 조치했어야 할 사항으로 삭제된 지 5년 가까이 되는 인용 조문의 개정은 시의적절하지 못함
 - ※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연된 이유와 규정의 미정비로 행정상 오류 또는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같은 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삭제한 이유와 최근 4년간(2020년 ~ 2023년) 감면액이 없다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과 제2항에서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와 같이 최근 3년(2021년 ~ 2023년)간 감면액이 없다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덧붙여, 2024년 11월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은 충북도가 유일한데 이 조문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감면 기한 조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는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관광단지 신설 또는 증설 사업 현황과 앞으로 추진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감면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23년에는 감면액이 존재하지 않는데,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2조는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과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지역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이 조문은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나, 비용추계를 보면 최근 감면액은 없으며, 감면예상액도 없어 실효성이 있는 조문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도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 안 제7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조문을 전문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취득세 7년과 3년의 감면기간과 「지방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취득세 7년과 3년간의 감면기간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15년 또는 10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려는 것임
 - 또한, 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충북도와 인접해 있는 충남도(2020년 12월 30일 일부개정)와 강원도(2021년

10월 29일 일부개정)의 경우 이미 감면 기간에 관한 15년 또는 10년간 세액 전액 면제 규정을 두었고, 신설안인 제2항제3호의 외국인 투자비율 해당하는 취득세의 전액 면제 규정도 두고 있음

- 비용추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약 42억원을 감면했고, 3년간 감면예상액을 약 2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도 재정 부담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도세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및 안 제11조의3)

- 안 제11조의2는 2023년 12월 29일 신설된 법 제79조의2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에 추가로 50%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11조의 3은 2023년 12월 29일 신설된 법 제80조의2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법 제80조의2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에서 정한 취득세 50% 감면에 추가로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취득세 50%의 감면에 추가로 25%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8개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
- 다만, 안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9조(관광

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안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등 5개 감면 규정의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감면액과 감면예상액(2025년 ~ 2027년)을 고려했을 때 기한 연장을 통한 감면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상위 법령 위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률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를 “이미”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을 경감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 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

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⑥ 제5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 2027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이미-----

----- 2027년 12월 31일-----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 2
2027년 12월 31일-----

② -----

----- 2027년 12월 31
일-----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항제1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의 감면기간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생략)

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100분의 15

② -----

----- 2027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 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⑥ 제5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 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0. 4. 12.,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2021. 12.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

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삭제 <2020. 1. 15.>

⑦ 삭제 <2021. 12. 28.>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12. 27.>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 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 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자” 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2020. 2. 11.>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농촌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 8. 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4., 2014. 1. 14., 2016. 12. 20.>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 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8.>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

2. 비용 발생 요인

- (감면기한 연장)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7개 조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세율변경)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개정)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 면제 등
- (감면신설) 해외진출 후 도내 복귀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3. 관련조문

- 도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세(취득세) 감면기간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 해외진출 후 도내 복귀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11조의2~3)

<감면기한 연장>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조제1항)
-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물 생산단

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4조제1항)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5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안 제9조제2항)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감면기간 및 세율변경>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관련법조항 이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간 및 세율변경(안 제7조)

구 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세 감면조례			
			현행		변경(안)	
	기간	감면세율	기간	감면세율	기간	감면세율
외국인투자신고사업	사업개시후5년	면제	사업개시후 7년	면제	15년	면제
	다음2년	50%	다음3년	50%		
사업의 양수방식 투자사업	사업개시후3년	50%	사업개시후 5년	50%	10년	면제
	다음2년	30%	다음3년	30%		
	감면결정 후~ 사업개시전	50%	-	감면결정 후~ 사업개시전	면제	

<감면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11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경감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11조의3)

구 분	추가 경감률	감면 범위
창 업	100분의 50	법 50% + 조례 50%까지
수도권에서의 이전	100분의 50	법 50% + 조례 50%까지
공장 신·증설	100분의 25	법 50% + 조례 25%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① 감면연장·확대 :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감면액 평균으로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조 문 내 용	최근 5년간 감면액						5년간 평 균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8개 조문	5,800	1,368	163	102	1,690	2,477	1,160.1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21	7	3	1	9	1	4.2
제3조 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	-	-	-	-	-	-
제4조 제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1	1	-	-	-	-	0.2
제5조 제1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843	17	-	9	450	367	168.6
제6조 제1항 제2항	도시가스사업 지원 감면	140	115	25	-	-	-	28
제7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4,251	709	113	90	1,230	2,109	850.3
제9조 제2항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	544	519	22	2	1	-	108.8
제12조 제1항 제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	-	-	-	-	-	-

② **감면신설** : 「별첨」의 공장신·증설 예상 입주기업 기준, 평균으로 작성

(단위 m², 천원)

토 지			건 물			과표 계 G=C+F	과세금액 (백만원) H=G×4%
면적 (m ²) (A)	m ² 당 금액 (원) (B)	과표 (백만원) (C=A×B)	면적 (m ²) (D)	m ² 당 금액 (원) (E)	과표 (백만원) (F=D×E)		
134,308	190,093	25,531	62,153	2,118,891	131,696	157,227	6,289

* 취득세 세율

○ 제11조의2(국내복귀 기업) 추계 (지특법 50%, 조례 50% 감면)

- 산출 : 6,289백만원 × 1개소 = 6,289백만원(지특법 3,144.5, 조례 3,144.5)

⇒ 입주예상 기업 수 : 1개소(2026년)

○ 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의 이전 등) 추계

[창업·이전] 추계 (지특법 50%, 조례 50% 감면)

- 산출 : 6,289백만원 × 1개소 = 6,289백만원(지특법 3,144.5, 조례 3,144.5)

⇒ 입주예상 기업 수 : 1개소(2027년)

[공장신·증설] 추계 (지특법 50%, 조례 25% 감면)

- 산출(계) : 6,289백만원 × 75% × 7개소 = 33,018백만원(지특법 22,012, 조례 11,006)

· 2025년 : 6,289백만원 × 75% × 4개소 = 18,867백만원(지특법 12,578, 조례 6,289)

· 2026년 : 6,289백만원 × 75% × 2개소 = 9,434백만원(지특법 6,289, 조례 3,145)

· 2027년 : 6,289백만원 × 75% × 1개소 = 4,717백만원(지특법 3,145, 조례 1,572)

⇒ 입주예상 기업 수 : 7개소(2025년 4개소, 2026년 2개소, 2027년 1개소) 예상

나. 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계 결과 : 20,776백만원(3년간)

(단위: 백만원)

구분	조 문 내 용	감 면 율	연도별 감면예상액(추계)				비 고
			계	2025	2026	2027	
계	10개 조문		20,776.3	7,449.1	7,450.1	5,877.1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취득세(100%)	12.6	4.2	4.2	4.2	
제3조 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취득세(100%)	-	-	-	-	
제4조 제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취득세(75%)	0.6	0.2	0.2	0.2	
제5조 제1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취득세(75%)	505.8	168.6	168.6	168.6	
제6조 제1항 제2항	도시가스사업 지원 감면	취득세(50%)	84	28	28	28	
제7조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100%)	2,550.9	850.3	850.3	850.3	
제9조 제2항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	취득세(25%)	326.4	108.8	108.8	108.8	
제11 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	취득세(100%)	3,145	-	3,145	-	법50, 조례50
제11 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창업·이전 취득세(100%)	3,145	-	-	3,145	법50, 조례50
		공장신·증설 취득세(75%)	11,006	6,289	3,145	1,572	법50, 조례25
제12조 제1항 제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취득세(100%)	-	-	-	-	

5. 재원조달 방안

- 세제감면은 간접적 지원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
- 세수실적의 주기적 분석, 납세홍보,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등으로 세수확보 노력